

2003년 노동시장 평가



이 남 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ncllee@krivet.re.kr

글을 시작하면서

동남아경제는 2003년 상반기 이라크전쟁,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여파와 같은 복합적인 악재로 불안정한 기초를 보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라크전쟁은 연합군과 침단무기 덕분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도 전 세계에 확산되는 듯하여 긴장을 하였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소 진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하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5년 여간 큰 폭으로 등락하여 온 가운데 GDP 성장률이 5%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3년의 경우 GDP 성장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2003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싱가포르 17.0%, 대만 4.2%, 인도네시아 3.9%, 말레이시

아 5.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만 유일하게 2.3%로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신정부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전반에 걸쳐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아직도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선자금조사, 이라크 파병문제, 불안 핵 폐기물처리장 건립, FTA(자유무역협정), 노사불안 등 국가적인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최근의 우리 사회 현상을 볼 수 있는 예로 2003년 대학교수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 1위로 우왕좌왕(右往左往)을 꼽고 있다. 선정 이유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8.6%로 전체 실업률 3.6%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12월 고용동향). 최근 3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청년실업률은 11월에서 그 다음해에 2월까지 평균 1.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글에서는 2003년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정책 평가와 향후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동향

1999년 이후 노동시장 주요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0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3년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0.2)을 보여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 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이래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 1/4분기 60.3%로 감소세를 보이다고 2/4분기에는 61.8%로 증가, 3/4분기에는 다소 감소된 61.6%를 기록하였다. 2003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756천명으로 1/4분기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나 2002년보다는 48천명이 증가하였다(〈표 1〉 참조).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1. 인력수급의 불일치

외환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이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 방식이 바뀌고, 산업구조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정부의 고용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보면 여전히 고성장 시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요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숙련된 경력직 사원을 선호하고 있다. 30대 그룹과 공기업, 금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경력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40.7%에서 2002년 81.8%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노동부, 2004).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원하는

〈표 1〉 1999년 이후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 천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생산가능인구	35,757 (1.2)	36,186 (1.2)	36,579 (1.1)	36,963 (1.0)	37,337 (1.0)	37,193 (1.0)	37,297 (1.0)	37,391 (1.0)
경제활동인구	21,666 (1.1)	22,069 (1.9)	22,417 (1.6)	22,877 (2.1)	22,903 (0.1)	22,439 (0.4)	23,055 (-0.2)	23,050 (-0.1)
경제활동참가율	60.6	61.0	61.3	61.9	61.3	60.3	61.8	61.6
취업자	20,291 (1.8)	21,156 (4.3)	21,572 (2.0)	22,169 (2.8)	22,132 (-0.2)	21,633 (0.6)	22,303 (-0.5)	22,295 (-0.5)
실업자	1,374	913	845	708	770	806	751	756
실업률	6.3	4.1	3.8	3.1	3.4	3.6	3.3	3.3
비경제활동인구	14,092 (1.2)	14,118 (0.2)	14,162 (0.3)	14,086 (-0.5)	14,435 (2.5)	14,755 (1.9)	14,243 (3.2)	14,341 (2.8)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직장을 얻는 일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95년 대학 설립 규제가 완화된 이후 대졸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률은 95년 51.4%에서 2003년 79.7%로 높아졌다. 동 기간 동안 대졸자 수는 32만4천명에서 50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양산은 예고된 결과로 2003년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은 59.2%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취업난 속에서도 버텨온 직장(decent job)만을 고집하는 청년층의 눈높이 조절 실패도 한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1999년 1.89%에서 2003년 3.9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졸자는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2. 고용구조의 불안정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사상의 지위에 의해 분류된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1993년 2월 40% 이하에서 IMF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비정규직에 대한 논쟁-특히 범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면 관계상 기술하지 못했음).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상용직 근로자 수는 106천명,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109천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기간 동안에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일용직 비율은 3.6%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추이

(단위 : 천명, %)

분류	1997(A)	1998(B)	2000(C)	2001(D)	2002(E)	2003(F)	증감(F-A)
상용직 근로자 수	7,282	6,534	6,395	6,714	6,862	7,411	129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	6,122	5,762	6,965	6,944	7,319	7,213	109
임시·일용직 비율	45.7	46.9	52.1	50.8	51.6	49.3	3.6

주: 2003. 12.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3〉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2.6	6.8	6.3	4.1	3.7	3.4	3.6
15~29세	5.7	12.2	11.0	7.7	7.6	6.6	8.6
남자	6.4	14.1	12.9	8.9	8.9	8.7	-
여자	5.0	10.0	8.9	6.4	6.3	6.4	-

주: 2003. 12.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003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혼란과 변화와 개혁이 혼합된 한 해였다. 경제성장은 2% 수준에서 그쳤으며 많은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급속한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 등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갔다.

3. 청년 실업의 증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6.8%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2002년에는 3.4%까지 낮아졌으며, 이러한 실업률 하락 추세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1998년의 12.2%에서 2002년에 6.6%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2003년 12월 현재 훨씬 증가한 8.6%에 이르러 전체 실업률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내에서도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다. 여성보다 남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징병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징병제로 인해 군입대전과 제대 후의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오히려 여성의 실업률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여성이 몰려있는 저학력·저연령층의 취업문이 타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고학력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는 만큼, 상급학교 진학 준비 기간 동안 혹은 진학 준비를 명분으로 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오가는 상황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결혼이나 가사, 육아 등의 이유로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 반면,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30세 이상 남성과 비교하여 10% 정도밖에 낮지 않을 정도로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학, 휴학생을 제외한 청년층 중 구직단념자 등을 감안한 사실상 실업률은 24.5%(통계청 발표, 2003. 5월 현재)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공급이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구조적 실업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물론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만 유독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사실상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업통계로 잡히지 않는 인구가 다른 OECD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평가와 대책

2003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혼란과 변화와 개혁이 혼합된 한 해였다. 경제성장은 2% 수준에서 그쳤으며 많은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 급속한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 등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갔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3년도 노동시장의 평가와 향후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째, 2003년 1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거의 두 배 반 정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실업률과 고용불안이 단순히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경영 실적을 낸 개별 주력 기업들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지난 3년 동안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앞선하거나 인턴활용 및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 채용방식에 맞춰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 IT 인력 단기 해외 취업연수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고용을 늘려가면서 성장해가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취해주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

제는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3~4년간에 걸쳐 풀어 나간다는 자세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도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참여 부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OECD 자료를 분석한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일본 경제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추락하였으며, 독일경제는 지난 친 노조파위 때문에 경직되어 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성장 동력의 엔진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향후 어려운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실업률 감소와 사회적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인력을 양성·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실업난 속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도 노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